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전기차, 미국】美 캘리포니아, '36년부터 디젤 트럭 판매 금지
- 【폐배터리, 핀란드】핀란드 에너지기업 포르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개시
- 【반도체, 대만】대만형 칩스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 【수출제재, EU】EU 집행위,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위한 2차제재 도입 검토
- 【천연가스, EU】EU, 가스 공동구매 플랫폼 신설...러시아산은 전면 배제
- 【의약품, EU】EU 19개국 핵심의약품법 제정 추진...“中 원료의약품 의존도 심각”
- 【대중관계, 유럽】독일·이탈리아 등 미국의 對中 견제 정책 동참 움직임
- 【구리, 인니】‘구리광석 수출금지’ 인니, 제련소 완공 지연에 일부 수출 허용
- 【팜유, 인니】인도네시아, 팜유(CPO)에 대한 수출쿼터 비율 하향 조정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① 주요국의 탈달러화 행보와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현황

○ 공급망 돌보기

- ① EU 재생e 목표 시리즈 제2편
- EU의 2030년 재생e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공급망 전문가

- ①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

○ 공급망 소식통

- ① KOTRA GMV 2023 수출상담회 안내(~6.3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전기차, 미국] 美 캘리포니아, '36년부터 디젤 트럭 판매 금지

- 4.28일(현지시간) 美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세계 첫 중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인 '첨단 청정 차량 규정(Advanced Clean Fleets, ACF)'을 만장일치로 통과
 - '36년부터 디젤 트럭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50대 이상 트럭을 운영하는 회사는 '42년부터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해 배기가스 제로를 달성해야 하며, '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달성 목표
 - '35년까지 주요 항구를 오가는 화물 운반 트럭은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며, 쓰레기 트럭·스쿨버스는 '27년까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 필요
- 대기자원위원회(CARB)에 따르면, 중·대형 트럭은 전체 차량의 10%에 불과하나, 전체 질소산화물의 약 1/3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오염의 1/4 이상을 차지
- 한편, 미국의 주요 트럭 제조사는 디젤 트럭 대비 구매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전기 트럭 보급에 반대하기 시작했으나, 위원회는 정부 및 연방 구매 지원금과 총소유비용, 충전 인프라 정책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출처: CNBC(23.04.28), NYT(23.04.3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폐배터리, 핀란드] 핀란드 에너지기업 포르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개시

- 4.25일(현지시간) 핀란드 에너지기업 포르툼(Fortum)은 최근 전기차 폐배터리의 블랙매스*에서 EV 배터리에 사용할 광물을 추출했다고 발표
 - * 블랙매스(Black Mass):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물질로, 리튬·코발트·니켈을 포함
 - 포르툼社は '22년 핀란드 하르야발타에 약 2,700만 유로(약 392억)를 투자하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했으며, 동 재활용 설비를 통해 최근 EV 배터리에 사용할 광물을 추출
 - 또한, 포르툼社は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매스에 포함된 원재료의 95%를 회수하여 EV 배터리에 코발트, 니켈 황산염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 외, 유럽 내 여러 기업에서 배터리 재활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23.6월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를 앞둔 '배터리 규정(Battery Act)'에 원료 재활용 기준이 명시된 바, 향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 주목 필요
 - 스웨덴 배터리 제조사 노스볼트(Northvolt)는 블랙매스에서 원료를 회수하기 위한 설비를 개발 중이며, 벨기에 소재 다국적기업 유미코어(Umicore)는 '26년까지 유럽 내 배터리 재활용 공장 신설 예정
 -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30.1.1일부터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내 코발트·납·리튬·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 * (30.1.1~)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 → (35.1.1~) 코발트 20%, 납 85%, 리튬 10%, 니켈 12%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반도체, 대만] 대만형 칩스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 대만 공상시보(工商時報) 보도에 따르면, 5.1일(현지시간) **대만형 칩스법 시행규칙(안) 정식 입법 예고**
 - '22.11.17일 대만 행정원은 '대만형 칩스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조례의 제10-2조 신설안을 승인하였으며, '23.1.7일 대만 입법원이 의결한 바 있음
 -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세가지 자격요건 중 ① R&D 투자액, ②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에 대한 하한선을 각각 60억TWD(약 258억원)·6%로 책정, ③ 유효세율 요건은 '23년 12%, '24~'29년 15%를 기준으로 함
 - '22년 R&D 투자 기준, ①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는 24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개사*는 ②번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됨
 - * TSMC, Mediatek, Delta, Realtek, Windbond, Novatek, Novoton, Phison, Ennoconn, Nanya
 - R&D 투자 외에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이 100억 TWD(약 4,312억원)**를 상회해야하는 조건도 추가로 충족 필요
 - R&D 투자와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에 대한 감면액은 합산 기준으로 당해 법인세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처: KOTRA 타이베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 종합

■ [수출제재, EU] EU 집행위, 對 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위한 2차제재 도입 검토

- EU 집행위원회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과 함께 추가 제재안으로 우회 방지를 위한 '2차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 '2차제재(역외제재, Extraterritorial Sanction)': 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것
 - EU 집행위는 지난 5.5일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회원국에 전달하였으며, 오는 5.10일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
 - 더불어 추가 제재안으로 제 3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량이 불명확한 이유로 급증하는 경우 해당 제3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의 우회수입을 위한 중개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2차제재의 도입 배경
 - 특히, 구체적인 EU의 2차 제재 대상으로 2개 중국기업과 5개 홍콩 기업*을 지목하였는데, 일부 기업은 복수의 러시아 군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EU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함
 - * (중국기업) 3HC Semiconductors, King-Pai Technology
 - (홍콩기업) Sinno Electronics, Sigma Technology, Asia Pacific Links, Tordan Industry, Alpha Trading Investments
 - 2차제재 부과에 따른 반발로 해당국의 친중·친러 성향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 한편, 이번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서는 벨라루스 비료 제재 확대 여부와 러시아 농산품 제재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협의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5.02, '23.05.08)

[천연가스, EU] EU, 가스 공동구매 플랫폼 신설...러시아산은 전면 배제

- EU 집행위원회는 4.25일(현지시간) 가스 공동구매 수요를 취합하고 판매업체들과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애그리게이트 EU'(Aggregate EU)* 운영을 개시

* '22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여파로 가격이 급등하여 러시아산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 러시아가 소유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공급업체는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전면 배제되며, EU 27개 회원국 외에도 인접국인 우크라이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국적 업체들이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음

- 유럽으로 가스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5월 초까지 플랫폼을 통해 판매 희망 물량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이 마감되면 수요·공급량이 맞는 구매 그룹과 판매자 간 협상을 거쳐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후 1년간 두 달마다 플랫폼을 통한 공동구매 입찰이 실시될 예정

• EU 집행위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성사될 시, 그간 구매 물량이 적어 가격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출처: 연합뉴스(23.04.26)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의약품, EU] EU 19개국 핵심의약품법 제정 추진...“中 원료의약품 의존도 심각”

- 지난 5.2일 벨기에 정부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의약품법 제정 추진을 제안

• 동 제안은 EU 내 필수약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의약품원료 및 기초화학물질의 생산을 촉진해 중국과 인도 등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벨기에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19개국이 이를 지지

* PGEU (Pharmaceutical Group of the European Unio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원료의약품 중국 의존도는 약 40%에 달하며, 의약품 공급의 대부분이 해외의 소수 제조자에 의존하고 있음

• △EU내 필수약품 생산 △의약품원료 생산 △기초화학물질 생산 활성화 △EU 연대 메커니즘 설립 △핵심약품 특별 모니터링 △EMA(유럽의약품청)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동 제안에 포함

• 코로나19 초기 타이레놀 성분 등의 인도의 의약품 수출 금지와 유럽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긴장고조 상황에서 공급망 위험을 우려하는 EU국가들이 의약품 생산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것으로 추측

- 벨기에 등 19개국*의 지지를 받는 핵심의약품법 제정 요구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체코, 스페인,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몰타,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출처: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23.05.03), FT(23.05.03)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대중관계, 유럽] 독일·이탈리아 등 미국의 對中 견제 정책 동참 움직임

- 4.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기존 대중 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美 대중 견제 정책 동참 징후 보도**
- 독일은 반도체 수출통제, 이탈리아는 기술 보호 등으로 대중 견제에 동참할 것을 검토 중
 - 4.27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中에 반도체용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 시행 시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독일 머크·바스프 등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는 G7 국가 중 유일하게 中과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였으나, 자국 타이어 기업과 中 에너지기업 간 기술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對中 무역 감소 방안 검토 중
- EU 27개 회원국 간 對中 정책 관련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5월 EU 정상회의에서 대중 전략 논의 예정
출처: 블룸버그(23.04.29), 조선일보(23.04.2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구리, 인니] '구리광석 수출금지' 인니, 제련소 완공 지연에 일부 수출 허용

- 4.29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인니는 '23.6월부터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자국 내 구리 제련소의 완공이 늦어지면서 **일부 품목*에 한해 '24.5월까지 수출을 허용**
- * 수출 가능 품목: △美 광산대기업 프리포트 맥모란이 인니 파푸아 지역 그라스버그 광산에서 생산하는 구리 정광, △인니 광산기업 암만미네랄이 서부 누사텡가라 지역에서 생산하는 구리 정광
- 프리포트社は 동자바에 30억 달러(약 4조 200억 원)를 투자해 연 170만 톤의 구리 정광을 처리할 수 있는 제련소를 건설 중이며, 암만미네랄社도 누사텡가라에 연 90만 톤의 구리 정광 처리시설 구축 중
- 두 기업 모두 연내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완공률은 60% 수준으로 **완공 목표일을 '24.5월로 연기**
- 광산 업체는 “원광 처리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막는다면 채굴량을 줄여야 한다”며 유예를 요구 중
출처: 연합뉴스(23.04.29), CNN 인도네시아(23.04.3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팜유, 인니] 인도네시아, 팜유(CPO)에 대한 수출쿼터 비율 하향 조정

- 인니 무역부는 '23.5.1일부 팜유 내수시장공급의무(DMO) 정책에 따라 **수출쿼터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발표
- 팜유(CPO)의 내수시장공급의무(DMO) 비율을 1:6에서 1:4로 조정함에 따라 팜유(CPO) 생산업체는 **인니 국내 공급량의 4배까지만 수출 가능**하며, 내수용 식용유 생산 목표를 45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축소
 - * 인니 정부는 '23.1.1월 팜유 내수시장공급의무(DMO) 비율을 1:8 → 1:6으로 감축한 바 있음
- 글로벌 팜유(CPO)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업체는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 더 이상 내수 공급을 늘리지 않는 추세로 내수용 식용유 공급과 가격 안정이 목표
 - * '23년 국제가격(MYR/T): 4,174(1.1) → 3,815(2.1) → 4,182(3.1) → 3,761(4.1) → 3,359(4.28)
- 글로벌 팜유(CPO) 가격은 하락 추세, **한국은 인니산 팜유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는 세계 공급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출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주요국의 탈달러화 행보와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현황

러·우 사태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탈달러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중·러 교역에서 위안화·루블화 결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중·러 우호국 중심으로 탈달러화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의 탈달러화 행보와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 최근 주요국의 탈달러화 행보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촉발된 탈달러화 기조는 중국, 이란, 중남미 등 신흥국을 포함한 탈달러 통화연대로 발전
 - '22년부터 본격화된 서방의 대러 제재를 기점으로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호국 간 블록화가 본격화되면서 탈달러화 기조 강화
 -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루블화·위안화 사용을 확대했으며, 중국·인도·이란·BRICS·EAEU 등을 통해 탈달러화 연대 확산 노력 지속
- 미국-사우디아라비아 양측의 정치·경제·군사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어왔던 페트로달러* 기반의 동맹이 최근 원유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균열 노출
 - * 페트로달러: 중동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및 관련 상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달러로 오일머니(oil money)를 뜻함
 - '22.10월 미국은 국제유가상승을 억제하여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자 사우디에 원유감산 자제를 요청했으나, 사우디는 이를 무시하고 OPEC+의 하루 생산량 200만 배럴 감산 결정
 - * 사우디는 경제적으로 고유가 유지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편, 외교적으로 탈석유화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
 - '23.3월 중국수출입은행은 사우디 국영은행에 무역대금 결제용 위안화 대출을 시행하고, '23.4월 OPEC+는 추가 116만 배럴 감산을 결정하면서 페트로달러 약화 가시화

〈최근 주요국의 탈달러화 행보〉

구분	당사국	내용
외환보유고	러시아	-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 확대 * (22.1분기) 1% 미만 → (22.4분기) 16%로 확대 - 위안화 비중이 60%까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22.12월)
	브라질	- 위안화가 외환보유고 2위 통화로 등극 (23.3월)
	글로벌	-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2.69%로 세계 5위 * '22.9월 2.75%에 비해 비중은 하락했으나, 금액은 소폭 증가 - 달러는 59.79% → 58.36%(22.12월)로 감소
무역결제 수단	러시아-이란	- 교역에서 루블화-위안화 결제 확대 ('15년 → '23년 60%까지 증가)
	러시아-중국	- 가스대금 루블화-위안화 결제 합의 (22.7월)
	러시아-인도	- 교역에서 루블화-루피화 결제 합의 (23.2월)
	중국-UAE	- LNG 수입 시(중국) 위안화 결제 합의 (23.3월)
	중국-브라질	- 교역에서 위안화-레알화 결제 합의 (23.3월)
	인도-UAE	- 비석유 교역에서 루피화 결제 합의 (23.3월)

■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 배경

-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달러 사용에 제약이 가해진 상황에서 **통제가능한 통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 금융거래 안정화 추진**
 - 러시아의 탈달러화 추진은 '14년 서방의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22년 러-우 사태 발생 이후 강화
 - * 초기에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 비중을 축소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등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점차 루블화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
 -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은 '22년 러-우 사태 이후 Δ SWIFT 결제망 배제, Δ 해외계좌 및 국부펀드 동결, Δ 자금조달 금지 등의 금융제재로 러시아의 금융자산 무력화 추진
- 러시아는 美 달러화 패권주의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 이란 등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 경제블록 형성 및 탈달러화 시스템 구축 추진**을 통한 다극화된 국제 금융질서 재편 의도

■ 러시아의 탈달러화 시스템 추진 방향

① 금(金) 기반 통화시스템 재편 및 국제통화 창설

- 러시아 내부적으로 서방과 분리된 금융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금본위제 논의 본격화**
 - 서방의 대러 금융제재 및 금 매매 제재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금보유고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독자적·안정적인 통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러시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금을 매입해왔으며, **현재 금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 유지**
 - '23.3월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고 구성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7,930만 온스(Oz)로 23.6%를 차지하며, 금액으로 환산 시 1,355억 6,410만 달러(약 179조원)에 달함**
- 러시아 정부는 **금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과 코인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러시아 중앙은행은 **디지털금융자산* 발행사로 Δ Sberbank, Δ Atomyze, Δ Lighthouse Fintech, Δ Alfa bank의 4개 기업을 지정 (23.3월 기준)**
 - * 디지털금융자산(Digital Financial Asset, DFA): 러시아에서 DFA는 암호화 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발행자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 비상장주식의 자본에 참여할 권리 등을 기반으로 발행 가능하며, 암호화 화폐와는 달리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수단으로만 인정**
- **우호국과 금을 기반으로 한 공동통화를 창설**하여 상호 교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이란과 공동으로 금 기반의 암호화 화폐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며, BRICS 회원국이 준비하는 'BRICS 통화'가 금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

② 루블화 기반의 에너지 교역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4.1일부터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정책의 일부로 **가스대금 지급을 루블화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개시
 - 비우호국은 러 **가스프롬은행(Gazprombank)*의 특별계좌를 이용해 루블화로 직접 입금**하거나 달러·유로화로 입금 후 **자동환전**해야하며, 결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임을 명확화
 - * 가스프롬은행은 러시아의 국영은행으로, 주로 유럽과의 에너지 교역 대금창구 역할을 해왔으며, 미국·EU의 대러 제재 (SWIFT 배제) 대상에서도 제외

○ 공급망 돋보기 : EU의 2030년 재생e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이전 호에서 EU 2030년 재생e 목표 달성에 대한 IEA의 분석을 다루었고, 이번 호에서는 재생e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 EU 재생e 목표 시리즈 〉

(56호) IEA의 전망

(57호)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 발전부문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IEA는 유럽 발전부문의 재생e 개발 및 보급 확대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회원국들의 △ 제한적인 재생e 개발·보급 정책, △ 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 상대적으로 더딘 송·배전망 확충 속도 등을 지적

① 제한적인 재생e 정책

-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회원국에서는 경쟁 입찰제도가 부재하며 현재 운영 중인 입찰제도에서도 입찰가격을 유일한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낮은 호가를 유발
- 이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제조업체의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분산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의 연장 여부가 불확실

② 인허가 문제

-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매에서 저조한 참여율의 원인으로 인허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개발자의 경매 참여를 위해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음
 - * 개발지역이 농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관할구역의 건축허가 이외에도 도로 건설, 교통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법정 소송으로 허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허가 관리당국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

③ 송·배전망 확충 속도

- 유럽의 대부분 송·배전망은 신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규 건설을 위한 행정 준비기간도 꽤 긴 편임
- 적기에 송·배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사회적 수용성, 투자 확보 등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

-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해소되면, '22년~27년 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보급 속도가 약 30% 개선될 것으로 IEA는 분석하였고,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설 용량이 52GW에 도달하여 REPowerEU의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①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

-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도입과 현 경매제도 개선이 요구됨. 즉, 경매제도가 없는 스웨덴, 벨기에 등은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네덜란드는 현 경매 제도를 여러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하며,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계획된 경매의 정확한 일정을 공지하고, 스페인과 폴란드는 경매 할당물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
- 또한, 투자비용 상승과 지속되는 송전망 혼잡 문제를 고려하여 경매 조건·규정을 수정해야 하고, 자가소비용 분산형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높여야 함

②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해결방안

- 일부 회원국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행정절차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1년 해상풍력에서 실질적인 법률 개정 작업이 완료된 국가는 독일과 스페인뿐임
-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
 - * '22.11월 에너지 공급위기 상황 극복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공익적 성격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육상풍력 사업 포함)에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 비상조치를 제안

■ 수송부문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IEA는 EU 및 회원국 차원에서 수송부문의 재생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에 △ 엄격한 규제 제도 도입, △ 바이오연료(특히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생산 확대, △ 전기차 보급 가속화, △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의 확대 등을 강조
 - IEA의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수송부문의 재생e 비중이 '30년에 29%에 도달하여 REPowerEU의 목표치 32%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부족한 나머지 3%p를 충족하기 위해 EU는 비생물계 원료기반의 재생e 연료*의 개발 및 생산 증대를 검토하고 있음
 - * Renewable Fuels from Non-Biological Sources : CO2와 수소를 토대로 만들어진 합성연료

■ 냉난방부문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목표 달성을 위해 EU 회원국 전체로 산업체와 건물 냉난방에서의 재생열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확대시켜야 하며, IEA는 특히 히트펌프를 '30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
 - 최근 유럽에서 히트펌프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1년 EU지역의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20만 대를 기록했고, 국가별로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크게 증가
 - * (독일) '22년 상반기에 설치된 히트펌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22.8월 한 달 동안 설치를 위한 연방기금 신청 건수는 '21년 한 해 동안의 수치와 비슷
 - * (폴란드) '22년 청정대기프로그램(Clean Air Programme)에서 전체 난방부문 시스템의 지원금 중 히트펌프가 차지하는 비중이 '22.1월 28%에서 6월에는 60%로 급증
 -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과 회원국의 정부 지원책으로 히트펌프의 보급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로 열수송망의 용량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망 확충과 히트펌프 분야의 숙련된 인력 양성이 필요
- 이외의 조치로는 △ 신규 건물에 화석연료 기반 기기의 설치 금지, △ 가계와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 재생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열분배 시스템 및 건물 개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있음

○ 공급망 전문가 :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

- 김경훈, 도원빈(2023.3.30),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요약

3월, 5월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이후 부진했던 양국간 교역 및 투자·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짚어보자.

■ 일본 수출규제 조치 경과

'19.07.01	일본, 對한국 산업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발표하며 기존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변경
'19.08.28	일본은 수출규제의 근거로 안보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배제
'19.09.11	우리 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
'23.03.16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 정부는 WTO 제소 취하 발표
'23.04.24	산업부, 일본을 백색국가로 복원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확정
'23.04.28	일본 정부, 한국을 백색국가로 재지정하는 절차 돌입

*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 고순도 불화수소, EUV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경제적 영향

- (교역 감소와 수입대체)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이후 무역코드(HSK) 기준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의 對日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체 수입이 증가
 - (불화수소) 對세계 및 對日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 * 對일본 수입비중(%) : ('18)41.9 → ('19)33.2 → ('20)12.9 → ('21)13.4 → ('22)7.7
 - * 對중국 수입비중(%) : ('18)52.0 → ('19)50.9 → ('20)74.8 → ('21)70.1 → ('22)80.1
 - (포토레지스트) 對日 수입의존도는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벨기에 수입으로 전환 (수출규제 품목인 EUV포토레지스트의 별도 통계는 산정이 어려움)
 - * 對일본 수입비중(%) : ('18)93.2 → ('19)88.3 → ('20)86.5 → ('21)79.3 → ('22)77.4
 - (불화폴리이미드) 수출규제 시행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기업들이 대체소재(UTG)를 채택하면서 對日 수입은 크게 감소
- (수입비용 상승)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선을 변경하면서 일부 품목의 수입 단가가 상승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
- (타국의 반사이익) 한·일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단절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반사이익을 누려왔음
 -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對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협력 기회가 차단된 반면 대만은 일본과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
- (효율적 자원배분 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 수입선다변화(1978~1999) 정책*과 같이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함
 - * 수입선다변화 정책 : 무역역조 완화 및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가능한 품목들을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기대효과

- 그간 한·일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 인접국 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이 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음

[참고] 수출규제 이후 한·일 교역 현황

- **(교역 비중)** '22년 기준 일본과의 교역 비중은 같은 인접국인 중국(21.9%)에 대해서는 물론, 유사한 인접국 사례인 프랑스-독일(14.2%), 미국-캐나다(14.9%) 간 교역비중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음
 - * '00년 15.7%(2위)에 달했던 일본과의 교역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2년에는 베트남(6.2%) 보다도 낮은 6.0%(4위) 기록
- **(수출입 기업 수)** 對日 수출입 기업 수와 비중은 '18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왔음
 - * 對日 수출입 기업 수 : ('18)47,928 → ('19)46,936 → ('20)45,684 → ('21)45,983 → ('22)46,346
 - 對日 수출입 기업 비중(%) : ('18)20.8 → ('19)19.6 → ('20)18.6 → ('21)18.0 → ('22)18.3

- **(교역)** 일본 수출규제 해제를 계기로 해당 소재·부품 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비용 절감)** 이미 품질이 검증된 일본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수입선 전환, 신규 조달처 물색 등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
 - **(절차 간소화)** 수출규제 해제로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기존 90일 가량 소요되던 전략물자의 수출신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협력)** 양국간 셔틀외교 재개로 경제 분야 장관급 협력 복원 및 민간 경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전망
 - 한·일 경제계는 지난 3월 17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교역 및 투자 확대,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그린 등 신산업 협력 강화, △자원 무기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데 이어, 5월 8일 기시다 총리와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
 - 자원이 부족한 양국이 연대하여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
- **(반도체)** 칩4로 대표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메모리반도체에 강점을 갖춘 한국과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일본이 협력한다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

■ 시사점

-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교역 증진 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투자 및 협력이 늘어나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경제안보 및 반도체 생태계 육성 차원에서 소부장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공급망 소식통 : KOTRA GMV 2023 수출상담회 안내(~6.30)

■ GMV(Global Mobile Vision) 2023 수출상담회 개요

- ▶ 행사명 : GMV(Global Mobile Vision) 2023
- ▶ 일시 : '23.9.12(화)~13(수)
- ▶ 장소 :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 등)
- ▶ 분야 : Smart SOC 및 ICT융복합 전반
- ▶ 규모 : (국내기업) 200개사 내외 / (해외바이어) 100개사 내외

■ 프로그램

	구분	내용	규모
1	컨퍼런스	▶ 최신 글로벌 ICT 트렌드 및 해외 진출 방향 제시 ▶ 해외 정부 기업 인공지능 활용과 비즈니스 기회	국내기업 및 기관 관계자 300명
2	ICT 산업별 전시관	▶ AI, 클라우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주요 ICT 산업별 전시관	10개 산업별 공동관 구성
3	수출상담회	▶ 우리 ICT 기업-글로벌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 KOTRA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유치 지원	국내기업 200개사 해외바이어 100개사
4	글로벌 ICT 프로젝트 세미나	▶ 전자정부,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분야 글로벌 프로젝트 설명회	국내기업 및 기관 관계자 200명
5	부대행사	▶ MOU 및 계약 체결식 ▶ ICT 스타트업 IR, 네트워킹 행사 등	국내기업 및 기관 10~20개사

■ 참가신청 안내 (~6.30)

- 내용 : 글로벌 ICT 분야 바이어·발주처 - 우리기업 간 1:1 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클릭) → 사업신청 → 'GMV'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참가 비용 : 무료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02-3460-7477 / gmv@kotra.or.kr)

■ 계약·MOU 바이어 초청 신청 안내 (~6.30)

- 내용 : 계약 및 MOU 바이어 초청 및 행사기간 내 계약·MOU 체결식 지원
- 지원 내용 : 바이어 왕복항공임(계약 100%, MOU 50%)*, 지정호텔 숙박 3박 지원 등
* 바이어 국가·지역별 항공임 지원 상한 상이
- 승인 기준 : 계약 미화 50만 달러 이상, MOU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의 신청 건 중 KOTRA 본사·무역관 평가를 거쳐 계약 5건, MOU 10건 최종 승인 예정(잠정)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클릭) → 사업신청 → 'GMV' 검색 → 첨부파일 신청 양식 작성 후 gmv@kotra.or.kr로 송부

글로벌 경제지표(23. 5. 10. 수)

[환율]

	'21말	'22말	'23.4말	5/8	5/9	5/10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337.70	1,321.40	1,323.90	1,324.80	0.07	4.77
선물환(NDF,1월물)	1,190.00	1,265.30	1,336.60	1,318.70	1,323.90	1,322.90	△0.08	4.55
₩/CNY	186.51	181.44	193.37	191.04	191.24	191.39	0.08	5.48
₩/¥100	1,032.48	945.56	989.42	980.99	982.27	978.15	△0.42	3.45
Y/U\$	115.14	133.73	135.20	134.70	134.78	135.44	0.49	1.28
U\$/EUR	1.1318	1.0617	1.1010	1.1041	1.0996	1.0965	△0.28	3.28
CNY/U\$	6.3681	6.9630	6.9147	6.9150	6.9245	6.9290	0.06	△0.49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0.6, (₩/¥100) 971.5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5.9(전일)	'23.5.10			
					전일비(5.9)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6.21	75.85	△0.4	4.0	△2.9
					△0.5%	5.6%	△3.7%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09.95	106.00	△4.0	26.5	△11.4
					△3.6%	33.3%	△9.7%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488.00	8,583.00	95.0	1583.0	196.0
					1.1%	22.6%	2.3%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77.50
					1.9%	11.6%	△1.7%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3,800.00	23,930.00	130.0	4830.0	△6495.0
					0.5%	25.3%	△21.3%

[반도체]

	'21	'22	'23.2월	'23.3월	'23.4월	5/5	5/8	5/9	5월(~9)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83	1.63	1.71	1.62	1.61	1.61	1.61
(%, YoY)	29.9	△23.0	△52.9	△54.8	△55.5	△52.8	△52.8	△52.9	△52.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6	6.42	6.40	6.40	6.40	6.39	6.40
(%, YoY)	14.7	10.7	△15.5	△18.7	△20.9	△22.6	△22.6	△22.7	△22.4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1.12.31	'22.12.30	'23.4.14	4.21	4.28	5.5	전주비(4.28)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1033.65	1037.07	999.73	998.29	△0.1%	△9.9%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1.12.24	'22.12.23	'23.4.21	4.28	5.2	5.5	5.9	전일비(5.5)	'22년말비
BDI	2217	1515	1504	1576	1552	1558	1598	2.6%	5.5%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최 수 빈 허 슬 비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구독>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피드백>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협력기관

